


(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-참조5)

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	성남시의회 제282회(1차정례회)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023.06.02.(금)
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

조례(안) 등 검토보고서

《검토사항》

- 조례안 7건
(제정4건, 개정3건)
- 민간위탁 동의안 4건

문화복지체육위원회

(전문위원 염 대 석)

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경위

- 제 출 자: 박종각 의원 등 17명
- 의안번호: 제5143호

2. 제안이유

- 「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 「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‘노인 및 치매 통합 지원’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포괄적인 ‘통합돌봄’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통합돌봄 지원 계획 및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·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기본계획, 통합 돌봄사업의 추진 및 조사 (안 제4조~제6조)
- 통합 돌봄 사례관리, 협의체 규정(안 제7조~제13조)
- 통합돌봄 콜센터, 교육 및 홍보, 포상 규정(안 제14조~제16조)

4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
 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9조
 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제1항, 제27조의2
 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제1항, 제12조, 제13조
 - 기 타
 - 입법예고(2023. 05. 04. ~ 05. 11.): 특기할 사항 없음
- ※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

5. 집행기관 의견: 동의

6. 검토 의견

가. 조례 제정의 취지 및 이유

-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살면서 건강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됨.
- 참고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노인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에서 주거·보건의료·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임

나.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

이 조례안은 본칙 16개 조문과 3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**안 제1조**는 동 제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시하고 있음.
 - 본 조례안은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에 따라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**안 제2조**에서는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정의하고 대상자는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인 통합 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 규정함.
- **안 제3조**는 우리 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
- **안 제4조**에서는 통합돌봄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면서 그 기본계획에는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9조¹⁾와 「지역보건법」

제7조제2항2)에 연계되어야 하며, 통합돌봄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,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, 교육·홍보·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.

- **안 제5조**에서는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,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지원, 요양·돌봄 서비스 등 효율적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예산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며
- **안 제6조**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, 가구특성, 거주환경,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, 수급 이력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- **안 제7조**는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, 지원 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까지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함.
- **안 제8조**에는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합돌봄 협의체(이하, “협의체”라 함)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.
 - 통합돌봄 협의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,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, 사업추진 상황,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도록 함.
- **안 제9조**에서는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, 위원의 자격 요건 등 위원회 구성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장치를 규정하여 제정안의 취지에 맞게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하였음.

1) 「**사회보장기본법**」 제19조(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<개정 2015. 7. 24.>

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.

③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「**지역보건법**」 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**안 제10조부터 제12조**까지는 협의체의 운영 관련, 위원 임기, 회의 소집, 위원·전문가·관계인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**안 제13조**에는 우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돌봄, 주거지원, 요양돌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.
 - 노인 인구 분포를 토대로 돌봄 관련 자원 등 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사업의 운영과정을 지속 점검하고자 함.
- **안 제14조**에는 노인복지, 치매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주고, 통합돌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는 콜센터 설치·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.
- **안 제15조**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**안 제16조**에는 통합돌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성남시 포상 조례」³⁾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**부칙 제2조**에는 「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에 따라 기존 운영하던 「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는 규정을 두었음.
- **부칙 제3조**에는 기존 운영하던 「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통합지원사업)중 통합지원 콜센터 및 특화사업의 경우 「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치·운영·시행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규정을 두었음.

다.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가

3) 「성남시 포상 조례」 제2조(포상대상자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성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주민("외국인"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소속 공무원 또는 시 관내 소재 단체에 수여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나 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5.10.>

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이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·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,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조례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문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절적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참고

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및 로드맵

비전 및 과제

비전

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는 포용 국가

목표

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

4대 핵심 중점 과제



주거

- 케어안심주택
- 집수리 사업
- 통합돌봄형 도시재생뉴딜



건강의료

- 방문건강 서비스
- 방문 의료
- 지역연계실 운영
- 만성질환 예방·관리, 재활, 회복



요양, 돌봄

- 차세대 노인장기요양
- 신규 재가서비스
- 재가 의료급여 신설



서비스 연계

- 통합돌봄창구 (읍면동, 보건소 등)
- 지역케어회의(시군구)
- 통합정보플랫폼

로드 맵

2026년 통합돌봄의 보편적 실행을 목표로 추진

2026 ~

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화

~ 2025

지역사회 통합돌봄
제공기반 구축

-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 대대적 확충
- 인력양성
-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
- 재정 전략 마련

2018 ~ 2022

선도사업 실시 및
핵심 인프라 확충

- 선도사업 :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 개발
- 생활 SOC 투자 : 케어안심주택, 주민건강센터, 통합돌봄형 도시재생 뉴딜
- 법·제도 정비 : ‘(가칭)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’ 제정, 개별법 및 관련 지침 정비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사회보장기본법

제19조(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.

③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7. 10. 2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0. 24.>

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<개정 2017. 10. 24.>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2조(건강증진과 의료제공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·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18.>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·요양 제도 등을 확립·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생활환경과 안전보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